

17개 신성장동력으로 700조 원 부가가치 창출한다

글 | 이주영_연합뉴스 기자 yung23@yna.co.kr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글로벌 헬스케어 등 17개 산업을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8년까지 7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 IT융합시스템 · 글로벌 헬스케어 등 집중육성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 각각 6개와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 5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녹색기술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로 선정된 신성장동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이다.

첨단융합산업은 세계시장 규모와 우리나라 기술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이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융합산업과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 6가지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다.

고부가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

연합포토

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글로벌 헬스케어와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MICE, 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등 5가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혔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지난해 222조 원에서 2018년 700조 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해 1천771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자리 창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향후 10년 간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로 이동 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무선통신과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연료로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시스템, 미래형 친환경 선박과 심해·극지적용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선박시스템(WISE Ship) 등을 집중 육성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만들어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월드베스트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R&D에 향후 4년간 6조3천억 원 투입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단중 R&D 분야 종합대책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녹색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돼 마련한 것으로 11개 관계 부처 협의와 경제인 간담회 등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과제 6개 등 모두 27개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간 9천억 원(20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 간 총 6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 R&D 투자 가운데 기초·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17%(2007년 기준 1천500억 원)에서 35%(2012년 7천억 원)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7개 신성장동력을 녹색뉴딜 사업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산업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세제지원,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연구개발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이 그 동안 기존 주력사업을 대

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해 세계 13위권에서 15년 간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배경에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한 만큼 우리 경제의 수익창출모델을 '쫓아가기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위기대책과 동시에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지금이 바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계 일각, 전형적인 '나눠주기식' 투자 지적

그러나 17개 신성장동력이 공개되자마자 녹색뉴딜과의 중복 문제, 고질적인 '나눠주기식' 투자로 인한 실효성 논란 등 갖가지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동력 비전이 녹색뉴딜 정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과의 중복 추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녹색뉴딜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목적과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녹색뉴딜의 경우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지만 신성장동력은 미래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시장창출지원,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 선정에 대해 국가 R&D 재원을 모든 첨단분야와 모든 첨단산업에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나눠주기식' 투자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과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신성장동력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선정됐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가 선진국 등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R&D 투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신성장동력도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엄밀히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